

최근의 국제환경동향

■ 환경처

1) 무역/환경

지속개발위원회는 UNEP와 UN 무역 및 개발위원회와 함께 GATT 체제를 대체할 WTO의 무역 및 환경 위원회에 대표가 되어야 하며, UNEP와 거대하고 강력한 WTO간의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몬트리얼협정과 같은 많은 환경협정들은 협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무역제한조치를 사용하고 있다. 환경론자들은 UR가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환경법이 무역에 대한 불공정한 장애라고 요구토록 할 것을 우려하는 반면에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개발된 국가들이 환경기준을 개발도상국가의 상품을 이윤이 많이 남는 시장에 수입되는 것을 막는 비관세 장벽으로 이용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무역체제가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할 정부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더 이상의 조사와 작업이 필요하며 환경기준의 명목하에 위장된 보호주의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2) CITES & 바젤협약

현재 ITTO(국제열대림기구)와 CITES(멸종위기에 놓인 종의 무역에 관한 조약)는 서명국가가 하고 있는 멸종위기 수목의 종(endangered tree species)을 선택하는 업무를 조정하기로 하였다.

개발도상국가들은 CITES기준은 너무 제한적이며, 야생동물에 관한 협약의 전문의 전문지식은 상당한 반면에 어떤 종이 실제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가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이러한 정보부족은 상품화할 수 있는 중요한 목재의 경우에 개발도상국가에 손해를 끼치게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공식결정서 문안은 어떤 열대림 수종이 멸종위기종 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되어야 하며 또한 국제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목재가 생산 및 소비국가의 경제에 대하여 갖는 중요

성과 생산 및 소비국가간의 보다는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미국 상공회의소는 폐기물이동에 관한 국제조약의 지원을 철회하였으나 협약 당사국들은 비 OECD 국가로 유해폐기물수출을 금지키로 하였는데, OECD 국가와 개발도상국가 간에 재활용폐기물 수출금지로 말미암아 미국은 연간 22억불 비용이 들어간다.

미국은 1992년에 BASEL협약 대상물질 약 2,000만 톤을 수출했고 미국환경청추계에 따르면 약 15만톤이 유해폐기물로 밝혀졌고 약 절반가량의 폐기물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수출되어 처리 되었다.

따라서 그린피스 환경운동의 공동간사인 Jim Vallet 씨는 미국내 산업체들은 전통적으로 유해폐기물 무역을 금지하는 것을 반대하여온 것은 당연한 결과이나 비 OECD 국가 혹은 개발도상국가는 그들이 제조부문에 필요로 하는 원료획득 수단으로 BASEL폐기물을 선호하고 수출금지에 의한 영향을 받는 주요 수출품은 금속조각이며 몇몇 원료획득에 필사적인 비 OECD 국가는 동 협약을 회피하기 위해 BASEL폐기물의 정의를 다시할 것을 밝혔다.

이에 대해서 그린피스관계자는 미국은 아시아국가에 납건전지를 수출하는 주요 국가이며 이 납의 재활용 관련시설을 조사한 바 근로자들이 납중독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유해한 폐기물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하여 차별을 두자고 미국 상공회의소에 건의했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BASEL 협약을 비준한 64개국가는 제네바에서 3월 25일 수출금지에 동의한바 있고, 미국은 서명은 하였으나 비준하지 않았으며 마지막까지 수출금지에 대한 지원을 보류했다고 그린피스는 밝혔다.

3) 일본의 환경정책

일본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 계획인 기본환경계획(Basic Environmental Plan)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포함시켜야 하는가

에 관한 수년간의 논쟁끝에 1993년 11월에 제정된 기본 환경법(Basic Environmental Law)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환경세를 시행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도 논쟁이 있었다.

현재 관련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기본안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현재의 상태와 전망, 환경 정책 및 지침의 원칙, 거시적인 집행과 부분적인 집행이며, 환경청 관계자는 고문기구인 중앙환경위원회의 소위원회가 초안을 검토하고 있고 6월말의 중간보고를 거쳐 최종보고는 금년말경으로 기대된다.

최종안이 도출되기 전에 각 부처는 각기 소관 행정 권한을 방어하고 확대하는 부처간 협상이 예상되며 동 계획을 마련할 때는 일본국내 및 다른 국가의 경제 및 환경 상황을 고려하면서 대기, 수질, 기타분야의 환경 보호 프로그램을 함축하는 종합환경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계획이다.

동 초안중 7개의 주요 환경관심분야는 대기, 수질, 토양, 화학물질, 폐기물, 자연 그리고 산업체의 오염 현상에 의해 야기된 건강위협 등이다. 동 초안에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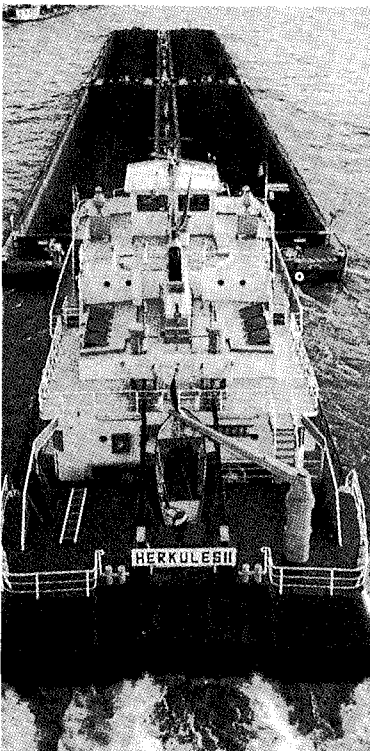
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정책원리는 환경에 기초하여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즉 인간과 환경간에 공동생존, 형평성이 있는 비용부담, 그리고 범지구적 협조체제 구축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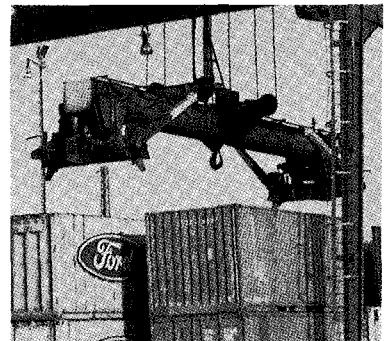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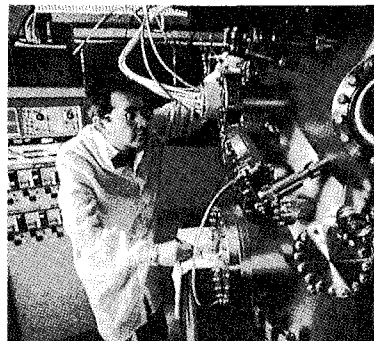
둘째, 만약 일본이 기본환경법원리를 시행하려면 개인의 편의희생을 고려하고 환경보호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셋째, 환경과 경제개발이 상충할 때 경제개발은 환경관심사에 의해 대체가 되어야 하며 이 부분이 다가오는 토론개최시 중심이 될 것이다.

넷째, 환경영향평가에 관해 업체, 관료, 산업체 오염의 피해자 등으로 부터 제시된 많은 의견을 소개하고 있고, 일본이 환경세를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거의 양극화 현상을, 즉 업계와 국제무역 및 산업부는 반대의견을, 지방행정부는 찬성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관료와 업체는 기술과 재정지원을 통해 일본이 보다 많은 범지구적 환경공헌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비록 ISO가 1996년에 그 표준을 발표하겠지만, 환경관리의 새로운 국제적인 수준점을 채택하는 회사를 인정해 주는 하부기구를 1997년도까지 설립하고 새로운 환경관리표준의 발표에 대비하기 위해 효과적인 품질관리의 요소에 대한 국제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ISO 9000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미국의 환경정책

1) 제 1 단계 녹색산업정책 발표

엘 고어 부통령은 '94.7.15일 클린턴 정부가 오랫동안 공약해온 녹색산업정책(green industrial policy)의 1단계를 밝혔다. 녹색환경정책의 종합전략 마련은 금년말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클린턴정부 출범이후 엘고어 부통령과 대통령 과학자문역인 John Gibbons에 의해 약속되어온 녹색산업정책은 혁신적인 환경기술의 개발 및 채택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제 1 단계 녹색산업정책의 내용은 첫째 기관간의 녹색기술 프로그램 조정, 둘째 적합기술의 검증 및 확인-정부승인 Stamp제공, 셋째 주와 지방간 상충되는 규제조화(녹색기술업체가 지역별로 개별허가를 득하지 않도록 조정), 넷째 산업의 기술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다소 완화, 다섯째 신기술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1억불 투자 여섯째, 미국의 녹색기술회사 제품의 해외판촉 강화이다.

이에 대하여 산업계에서는 폐기물처리 산업 등 전통적 오염물질 처리업체 등은 제1단계 녹색산업정책이 오염예방 기술을 추구하는 계획으로 오염물질 사후처리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저해하고 자기들이 사업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을 우려하였고, 덴버대학의 Donald Stedman교수는 청정 환경기술 생산업자들도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 예로 미국 EPA의 관료주의 때문에 오염 최대 유발 차량을 감지할 수 있는 원격감시장치 승인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캘리포니아 Environment Business Council의 사무국장 Brian Runkel은 주의 녹색기술로 승인을 받은 기술은 이미 많은 이익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에서도 Max Baucus 상원의원과 George Brown하원의원은 녹색기술진흥법안 공동 제안자로서 계획안에 찬성하고 일본의 환경산업이 향후 10년 이내에 두배로 성장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엘고어 부통령도 환경기술시장은 '92년 3천억불에서 '97년에는 4,250억불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2) 의료폐기물 처리병원 소각로 폐쇄

미국 EPA는 병원 소각로의 90%를 '95년 여름까지 폐쇄토록 하는 새로운 행정지침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번 제안은 규제대상이 아닌 병원 소각로에서 의료

폐기물을 소각시키는 과정에서 유해한 다이옥신(dioxin)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미 EPA관리는 말했다.

3) 생물다양성 보호

미국의 멸종위기종 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에 의해 보고되고 있는 야생동·식물 다양성의 38%가 안정화되고 있거나 개선되고 있음이 미국 내무성의 어류 및 야생동·식물청(Fish and Wildlife Services)이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현재 미국의회에서는 국가에서 생물다양성 보존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멸종위기종보호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미국 내무성이 제출한 '92.9월까지 목록화된 711개의 종 보호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 가운데 10%의 종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28%가 안정화되고 있다.

어류 및 야생동·식물 보호청장 Mollie Beattie는 1973년 관계법에 의해 711개의 종이 보호대상으로 목록화될때는 보호대상 종 모두 감소추세에 있었다고 말하고 단지 20여년만에 거의 40% 종의 개체수가 증가하거나 안정되고 있음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나 또는 위협받고 있는 종의 보호를 위한 그간 노력의 결실이라 평가하고, 그러나 40%의 성공율은 '90.10월 보고서에 나타난 40%의 성공율보다 다소 떨어진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종 보호의 성공으로 최근 미국 내무성은 매(bald eagle)를 멸종위기종 리스트에서 제외시키고 금년 가을부터 알래스카에서 Canada 암거위(geese)에 대해 부분적으로 사냥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어류 및 야생보호청은 25개의 종을 멸종위기(endangered) 종에서 위협받고 있는(threatened) 종으로 재분류 또는 보호대상 목록에서 제외 시키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한편 '92년 현재 목록화된 종의 2%가 멸종되고 있다고 믿어지나, 이에 대해 어류 및 야생동·식물 보호청은 그들은 이미 보호대상으로 등재되기 전부터 멸종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4) 환경기술 개발

'94.7.22 백악관은 국가 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자문아래 준비된

“Technology for a Sustainable Future”라 일컫는 보고서를 배포하였다.

상기 보고서 배포이후 엘고어 부통령은 수백명의 업계 지도자들이 모인 국립재생에너지 연구소(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에서 환경기술시장이 가장 빨리 성장하는 시장임을 강조하고 환경기술시장 규모가 '92년의 3,000억불 수준에서 향후 '97년까지 4,250억불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엘고어 부통령은 백악관은 금년 하반기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집된 갖가지 권고사항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 환경기술에 관한 특별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년 지구의 날까지는 종합정책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임을 언급하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환경기술산업으로 연간 총 1,340억불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고 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Bill White 미국 에너지성 차관은 미국이 현재 환경기술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기타 여러 국가들이 자기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독일과 일본이 그 예에 해당함을 지적하면서 일본은 30억불의 원조계획에 15억불의 환경기술을 연계하고 있음을 소개 하였으며, 또한 미국의 환경기술 수출규모는 '90년대 말까지는 수십억불 수준이나 다음 세기에는 100억불 수준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상기 보고서는 미국이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GDP의 상당한 부분을 환경부문에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같은 투자증가는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촉발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5) 온실가스배출량거래

온실가스배출량의 오염할당량의 범지구적 거래는 개발된 국가로부터 개발도상국가에 5,000억달러에서 1조달러의 새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난 6월 1일 국제연합 보고서가 밝혔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실가스오염 할당량의 거래는 개발도상국가를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로서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에서 U.N. 개발계획(U.N.Development Program)이 제시한 몇몇 제안사항으로서 개발협력은 자금공여 국가로부터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빈국개발을 돕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부유한 나라에서 빈국으로 자원의 이동을 증가시키는 이외에 온실가스 할당량 거래는 지구기후 변화를 야기하는 배출을 통제할 것이다. 동 보고서는 한 국제단체가 온실가스를 배출할 자격을 주는 오염할당량 거래허가증을 발급토록 제안하고, 이 국제단체는 특정한 기간동안 오염할당량을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허가할당량을 배분할 수 있다.

이와같은 오염할당량 거래는 2가지 문제가 제기 되는 바, 첫째는 범지구적으로 배출가능한 온실가스의 전체량에 각 국가가 동의해야 하고, 둘째는 허가를 할당해 주는 방법이 있다.

만약에 국민소득에 기초하여 허가증이 발급되면, 개발된 국가들은 대부분의 오염할당량을 갖게되며, 만약 인구에 의한다면 개발도상 국가가 대부분의 허가를 받게 된다. 국제연합 개발계획은 이 배분문제의 해결은 허가의 절반은 인구에 의하고 나머지 절반은 국민총생산에 기초하여 할당하는 것이며, 만약 이 안이 채택되면, 가장 큰 오염자인 개발된 국가들이 개발도상 국가들로부터 대부분의 허가증을 사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가상시나리오는 부유국가에서 빈곤한 국가로 매우 큰 자원이동을 야기하며 연간 5,000억달러 내지 1조달러에 이르는 자원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6) 환경마크(ECOLABELING)

ISO 14000의 일부는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상품임을 확인해 주는 여러가지 환경마크에 대한 필수적인 사항을 표준화 시키는 지침이다.

비록 ISO가 1996년에 그 표준을 발표하겠지만, 환경관리의 새로운 국제적인 수준점을 채택하는 회사를 인정해 주는 허부기구를 1997년도까지 설립하고 새로운 환경관리표준의 발표에 대비하기 위해 효과적인 품질관리의 요소에 대한 국제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ISO 9000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ISO 표준은 EPA의 오염방지 강조를 강화하고 회사들이 ISO 14000을 따른다면, 통제기술에 주로 의존하기 보다는 오염의 사전예방 접근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EPA는 그 표준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